

2004. 6. 16(水)

第25回 韓經研 포럼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 주 제 : 21C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 국가와 기업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 연 사 : 김 성훈 공동대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25회 한경연 포럼

21C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국가와 기업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김 성 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Tel: 02-549-7878 e-mail : kimsh@cau.ac.kr)

21C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하여

-정부와 기업의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

金 成 勳 (중앙대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사과나무가 자라지 않는 “沈默의 봄”

서울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기상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서울의 총 일조(日照)시간은 1449.7로서 하루평균 3.97시간에 불과했다. 지난 5년사이 무려 31%나 줄어든 수치이다. 이는 사과나무도 제대로 자라기 어려운 수준이다. 서울이 바야흐로 잠 못 이루는 어두운 밤의 도시로 유명한 시애틀이나 런던보다도 더 어두워 졌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신 날 서울의 대기오염도(大氣汚染度)는 치명적인 미세먼지가 300(ug/m³) 수준을 돌파했다. 선진국 주요도시의 수준이 대개 20~30이고 인체유해 허용한도가 150수준임을 감안할 때 지난 크리스마스 날의 미세먼지 농도는 가히 ‘살인적’이라 할 수 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서울대 연구팀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대기오염도로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1천명 이상이 조기사망하고 피해액이 최대 10조원을 넘는다고 추산했다. 이 모두가 자동차의 홍수, 생활폐기물의 방기(放棄), 공장오염, 농약과용, 환경생태계의 파괴 탓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의례 그러려니 무감각하다.

“봄이 왔다.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들은 노래하지 않는 침묵의 봄이 왔다”고 하며, 농약 폐해와 환경생태계 파괴 현상을 경고하여 세계를 발각 뒤집어 놓았던 레이첼 카아슨(R. Carson) 여사가 한국에 찾아 왔다고 가정해보자.

또 경제개발정책을 무분별하게 추구한 결과 그 부작용으로서 혹심한 빈부격차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그리고 생태계 파괴와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을 불러들이고 있는 “시장실패 현상”을 엄중히 예고한 조안 로빈슨(J.V. Robinson) 여사가 우리나라를 찾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이 일찍이 경고한 모든 불행한 사태들이 우리 사회 도처에서 만연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무어라고 말할 것인가. 시장실패, 정책실패, 그리고 환경파괴 현상들이 버무려진데다가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로 깊게 드리워져 있는 기형적인 경제발전 뒤편길에는 시나브로 죽음의 봄이 다가오고 있잖은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이면에는 이렇듯 과거의 ‘성장 요인들’이 이제는 ‘장애요인’으로 변환된데 기인한다.

GNP와 무역액 세계 12위 對 환경지속성 세계 136위

지난 30여년동안의 고속압축 경제성장은 1997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IMF 환란을 불러 들였고 그로인해 현재 극심한 빈부격차와 환경생태계 파괴등 경제사회발전의 지속성에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외형상으로는 세계 140여 국가 중 GNP로는 13위, 무역액으로는 12위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반적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나라별 환경 지속가능성 지수(sustainability index)는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136위(2002년)로 최하위권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투명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도 지수는 매해 떨어져 이제는 133개국 중 50위로 부패 부정의 소지가 높은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3천리 금수강산’을 노래하며, ‘아아, 서울에서 살립니다’를 찬미할 것인가.

이렇듯 우리경제가 8년 전 1인당 1만달러 소득을 달성한 이래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면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간 계층간 빈부격차와 사회갈등, 게다가 불가역적(不可逆的)인 환경생태계 파괴현상으로 먹을 음식(식량자급율 세계 최하위권인 27%), 마실 물 (오염도 20-40%), 숨쉬는 공기(서울의 대기오염도 세계 제1위),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세계 제1위)으로 인한 토양과 산천의 오염 심화, 그리고 국가경영 전반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고질화 현상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2001년까지만해도 세계 제1위의 대기오염도시로 악명이 높았던 멕시코시티가 민관이 함께 오염 줄이기에 노력한 결과 이제 서울 다음의 2위로 내려갔다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과는 너무 대조된다. 일찍이 레이첼 카아슨 여사가 경고했던 “죽음의 계절”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스며들고 있는데도 모두들 무감각하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2만달러 소득” 캠페인인가.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 뜬금없이 ‘2만달러 소득’ 캠페인이 튀어 나왔다.

1인당 GNP를 두배로 늘리기 위해선 얼마나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갈등을 겪어야 할지, 또 21세기 세계 인류의 화두인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도무지 그 실마리를 종잡을 수 없는 구호뿐이다.

도대체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구시대의 개발지상주의 시절의 GNP (국민소득) 타령을 국정지표로 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땅 투기와 난개발, 그린벨트 해제를 부추기는 정부정책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규제는 풀되 투기는 잡겠다는 공허한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갑작스레 IMF 경제위기를 맞이했을 때 DJ 정부는 대안 경제시스템으로서 지식기반사회의 신경제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개혁·개방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유수의 정보기술(IT)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IMF 환란극복을 비교적 단기간에 이룩할 수 있었다고는 하나, 환경생태계는 악화되고 중산층은 위축됐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와 실직자 및 신 빈곤층은 양산되었다.

신자유주의 일변도의 시장경제 일변도 정책 추진이 계층간 지역간 격차와 각종 사회갈등 그리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위협을 불러들인 것이다. 그 처방으로서 1999년부터 추진된 “생산적 복지”정책은 일정 정도 빈부 양극화현상 감소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와 병행하여 디지털 경제의 보편화가 개개인 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의 다양화, 쌍방(two-way) 교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의식 변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정부의 반응은 갈수록 경직돼 가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이 이러한데도 우리 경제학계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화신이 되어 구관조(九官鳥)처럼 시장경제, 무역자유화, 세계화의 좋은 측면만을 되풀이하여 제창하고 있다. 시장경제냐, 반시장경제냐의 양자택일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애담 스미스류의 시장경제 예정조화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생태학적 인간의 삶의 질 문제를 놓치고 있다.

그 결과가 다름아닌 유독 우리나라에 만연한 시장실패현상이며 경제정의(正義), 사회정의, 환경정의의 실종이다. 왜 (재벌)기업을 성토하는 사회가 유독 우리나라뿐이며, 각종 세계무역협상에 임하여 심장에 비수를 찌는 농민이 왜 유독 한국 농업인 뿐인가. 이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학계는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지도층 역시 그 이유가 자신들의 경직된 기득권 보호 때문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해법

시장실패와 정부 실패로 인해 정부정책의 혜택을 크게 받는 계층이 따로 있고 크게 피해보는 계층이 따로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찍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J.R. Hicks의 '보상의 원칙 (the Compensation Principle)'과 J. 롤스의 사회적 경제적 '최약자 보호원칙'에 따라 정책과 제도 양면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 즉 소득 기회와 복지 및 쾌적한 삶을 형평성 있게 충족시키는데 진력해 왔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약점과 모순점을 부단히 보완 개선하고 혁신해 왔다.

그 결과, 이른바 만민이 평등하게 잘 살게 하겠다는 사회주의체제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학계와 경제계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주의의 좋은 점만을 알았지 그 단점을 보완할 이러한 원칙과 처방을 마련하는데 너무 소홀하였다.

지식기반사회의 디지털 경제는 0(영)과 1(일) 사이에 0.1, 0.01 등 수백 수천의 숫자가 있음을 인정한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사이에도 수백 수천의 제3의 길이 있으며, 무역자유화와 보호주의 양극 사이에도 수백 수천의 상생의 방도가 있음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0과 1을 다양하게 결합 배열할 경우 수천수만의 윈-윈 전략을 창출할 수 있음

도 고민하려 안한다.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경제정의를 북돋우며, 사회적 환경적 정의를 경제정책에 반영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21세기 디지털시대의 윈-윈 방식인데도 말이다.

경제와 환경, 문명과 생태계, 인간과 자연,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간의 바람직한 공존공영의 길을 찾아 선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합리적경영·사회적공헌·환경생태계의 보전 기여를 통합 경영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미국의 인텔과 제너럴 모터스, 프랑스의 르노, 네델란드의 필립스, 일본의 소니·도시바 등 31개국 341개 기업이 유엔환경계획(UNEP)의 권고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대한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재무제표 보고와 함께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현대자동차와 삼성SDI, 포스코, SK 텔레콤 등이 일부 시작했거나 준비중이나 아직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감사를 받아 발표하는 세계 수준의 투명한 통합경영지표 단계는 아직 아니다.

21세기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하여

새해 새 경영전략을 준비하는 정부와 기업, 특히 2만달러 소득시대를 열어가자고 하는 노무현 정부는 선진국들처럼 먼저 재정과 환경과 삶의 질 문제를 통합 관리하는 녹색GNP 통합국민회계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골고루 배려하며 후손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국가목표와 폭이 넓은 정책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시대는 거시적 문제보다는 미시적 접근, 수익적 해법(효율·이윤)에 앞서 환경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접근방법 등 경제·사회·환경 정의목표를 통합하여 실천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고속 경제성장 정책의 의지가 강할수록, 후세와 후손들을 염두에 두는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자리 마련이 긴급할수록 경제도 환경도 살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적인 사고와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민, 관 합동의 “국토 살리기(대청소) 국민운동”을 제안하고 싶다.

쓰레기로 뒤범벅이 되어 생명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 바다와 강과 호수 및 저수지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산과 들과 흙을 뒤덮고 있는 각종 인공쓰레기를 치우는 대대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 마치 1930년대 세계 공황 때의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작한 다목적 치산치수사업과 토양 보존사업, 유럽의 자연(숲) 가꾸기 사업, 지난 IMF하에서의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과 같이 국민적 역량을 생태계를 살리는 대단위 공공사업에 집중시켰으면 한다.

그 가운데 일자리도 마련되고, 환경도 살리며, 국민 총화와 후손을 고려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 오늘날 선진국의 아름다운 산하와 수풀이 경제 공황기에 민, 관이 함께 시작한 것임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이야말로 쓰레기 등 오염물질로 날로 썩어가고 있는 연안 바다

와 시냇물과 호수(저수지)를 살리면서 일자리도 마련하고 후세의 자손들을 돌보는 범국민적 경제 및 삶의 터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때이다.

1석 3조의 축산퇴비 북한 보내기 운동

끝으로 가장 시급하고 남북한에 두루 혜택이 되는 친환경프로젝트는 북한에 유기질비료(퇴비)를 공급하는 일이다. 지금 남한 땅에는 축산분뇨가 과잉 방출됨으로 인해 산천이 오염되고 가축질병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반면 북한의 토질엔 유기성분이 부족하여 생산력 증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축산이 미미하고 산림이 헐벗어 연료가 부족한 형편에서 농림 부산물을 제대로 퇴비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지역별로 또는 전국 차원에서 축산 분뇨를 공동으로 수거하여 산림 및 농업 부산물 (예, 숲가꾸기 사업의 톱밥과 이파리, 농작물 부산물 등)을 섞어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면 우리 환경도 살리고 국내 유기농업도 지원하며 북쪽에 보낼 경우 생산력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역단위에서 먼저 농민단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변의 국제정세가 불리할수록 오히려 남북한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국토환경 정화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는 일이야말로 당대 우리 세대의 의무이다.